제 8회 일본 전문가 초청 강연회

강사: 서 형 원 (동북아 1과 과장님)
주제: 동북아 시대를 위한 한일 미래 지향적 협력의 틀

이론적인 것은 교수님들께 배웠으리라 생각하고 저는 실제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며 매스 미디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바탕으로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나누어드린 자료는 현재 한일 간의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들, 앞으로 어떻게 한일 관계를 이끌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우리 정부의 기본적인 구상입니다. 한일 관계는 사실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이 보기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일도 신문에 한번 나면 기본적인 관계가 흔들거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관계가 크게 변화합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대국적으로 협력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에 관한 것입니다. 사실 과거에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한일 관계의 목표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현정부에 있어서는 큰 목표로서 동북아에 있어서의 번영을 잡았습니다. 이는 한일 정상 회담시 노무현 대통령이 고이즈미 총리와 함께 발표한 것입니다.

동아시아 지역에 있어서 평화 안정 체제를 주도해나갈 수 있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 밖에 없다는 공통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합니다. 실제적인 실천 방향으로서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평화 체제 확립 문제를 말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이 지역에서 가장 큰 문제는 북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한일간 가장 큰 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일 관계도 좀 더 미래 지향적으로 갈 수 있겠다라는 것이 저희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둘째로 한일 양국이 조그만 일로 흔들거려서는 안되겠다. 미래의 비전으로서 한일 간의 통합된 사회를 목표로 여러가지 아이디어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기본틀은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해나가자는 것으로 요즘에 나온 안 중에 하나가 한일 양국을 일일 생활권으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인프라를 구축해야 합니다. 지금 저희가 구상하는 것이 아침에 갔다가 저녁때 돌아갈 수 있는 체제입니다. 현재 김포에서 하네다 사이에 하루에 4편정도의 비행기가 있는데, 비행기 스케줄이 낮에 몰려 있습니다. 이를 8편으로 늘리는 것과 또한 비자를 완전히 없애는 문제도 나와 있습니다. 또한 미국,캐나다와 유럽국 사이에와 같이, 출국대를 넘어서면 바로 일본의 입국 심사대가 나오는, 기다리지 않고 바로 나가는 사전입국심사제도 도입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또 하나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한일FTA입니다. 이는 경제적 효과뿐 아니라 다른 면에서도 큰 효과를 가지고 올 것입니다. 이 상황을 우려해 중국이 삼국 FTA 방안을 내 놓고 있지만 현재 중국과는 조금 힘들 것 같고, 우선 일본과 한국이 우선 FTA를 체결하는 것이 미래의 동북아 공동체의 교두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특히 일본의 농수산 분야와 한국의 공업 분야에 이견이 커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체결해야 한다는 인식은 공통되고 있기 때문에 진전이 있으리라고 기대하고 있습

니다.

또한 역사 문제를 빼놓을 수 없겠습니다. 미래 지향적인 목표에 따라서 역사 문제 해결에 대해서도 진전을 이루어야겠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입니다. 역사 인식에 관련된 문제와 과거에 실제로 있었던 피해, 아직 치유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인도적 문제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언론에서 학자들 간의 논쟁은 전자, 역사 인식에 관한 문제가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는 해결되기 굉장히 어려운 문제 일 것 입니다. 정서적으로는 매우 정당하지만 논리적으로 같은 입장을 취해야 하는 것이 올바른가에 대한 비판이 일본 측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입장은 역사 인식 문제보다도 후자 인도적 피해를 우선 해결해야 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징병되어 사망한 국민들의 상처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상 문제가 한일 협정에 의해 해결되었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정부는 이미 해결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정부는 원폭 피해, 정신대 문제, 사할린 문제, 재일 한국인 문제 등은 청구권 협정 해결 목록에 해결되지 않았다고 일본 정부는 해결되었다고 봄으로서 의견 차이는 있습니다. 사실 일본 내에서 사망한 한국인들의 사태도 파악하기에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들을 해결을 해서 국민 정서에 한쪽 구석에 남아 있는 대일 피해 감정을 없애기 위해서는 정부간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한일 양 정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한 중일 삼국의 협력입니다. 한일 관계가 동북아 협력으로 나가기 위한 바탕으로 삼기 위해 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된 자세한 문제, 구체 안건에 대한 것은 질문 시간을 통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한일 FTA에 관련된 문제.

일본이 농수산물 반대 측면 있지만 우리가 그것에 대응하는 방안도 문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잘못된 정보로 인해 우리나라보다는 일본이 훨씬 경쟁력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있었는데요. 경제적인 측면에 타격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요.

- 외교부에서 통상 교섭 본부가 이를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손익 계산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한,일 양 정부간에 문제가 총론적으로는 찬성하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자신의 국가의 이익이 걸려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일 FTA에 관한 구상은 90년대 말부터 나왔습니다. 사실 일본 쪽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뒷 배경을 보면은 일본의 90년대의 잃어버린 10년을 주변 국가와의 FTA를 통해 해결해야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작된 공동의 민간 레벨에서의 연구가 끝나자 일본 정부는 정부간 논의를 해보자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 다음 산관학 합동 연구를 했는데, 단기적으로는 한국에 불이익이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유리하다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 건의서가 정부로 올라와서 작년 10월 초에 경제장관회의에서 한일 FTA에도 적극적으로 임하자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산업계에서 반대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각자의 부분별 손익계산의 결과이지요. 일본에서도 농,수산물 업계에서도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10월 협상 때 너무 의견 차이가 커서 우리로서는 조

금 더 사태를 정갈하고 냉각기를 가지고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농업 분야에서 유리하지 않겠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가격 측면에서는 우리가 유리하겠지만 차별화 전략에 있어서는 우리가 유리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2. 2005년도는 을사보호조약 100년이자, 1965년 국교 정상화 40주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행사를 준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일관계의 구조적 전환기가 아닐까, 또한 내용적으로 큰 전환기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총체적인 정책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한국은 어느 정도 정치적 발전을 이루었는데, 일본의 경우 자민당 체제 내에서 서로간 갈등이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정책을 좀 더 다각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본 내에서도 외무성에서는 우정의 해라고 하지만 정치는 움직이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중일 관계가 경쟁관계로 이루어져고 있어서 동북아 삼국의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한국의 역할, 또한 대 일본 정책에서도 구체적인 요구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한중일 정상회담에 대해서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는 사실 김대중 대통령의 힘이 컸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노무현 대통령의 방일에서도 공동 선언 채택에 저희가 힘을 실어 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동북아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중일 삼국의 정상회담은 현재 ASEAN+3체제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정착이 되었지만 문제는 한중일 정상회담을 번갈아 가면서 ASEAN과 떨어져서 하자라는 아이디어를 이번 3월에 제시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라오스에서 열리는 회의에서 토의 예정입니다. 현재 일본과 중국이 야스쿠니 문제로 교류가 막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실 정상간의 교류만 없을 뿐이지 그 아래는 매우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정상 회담의 상징적 의미겠지요. 결국 동북아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중국, 일본, 이 아니라 한국이 중심적 역할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상의 우리 국력의 측면을 볼 때 앞서 나가기가 힘듭니다. 이것 저것 계산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너무 신중하다라는 비판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야스쿠니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일간의 역사 문제는 사실 야스쿠니 문제입니다. 태평양전쟁에서 서로 싸웠기 때문에 중국의 전범에 대한 반대의식은 우리 나라 이상으로 매우 강합니다. 중국으로서는 전범이 있는 곳에 가서 참배를 드리는 것은 인정할 수 없는 것이지요. 우리와 중국과 대응하는 방법이 달라야 하는 이유는 야스쿠니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희생양으로서 전쟁에 말려 들어감으로서 전범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 정부로서는 역사 문제가 한일관계간의 문제가 되서는 안된다는 것이 기본 입장입니다. 그러나 누구나 참배할 수 있는 제 3의 추도 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의 주장입니다. 사실 이는 김대중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나온 것으로 일본이 고려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야스쿠니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3. 역사 문제에 있어서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의 노력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 우선 재일 한국인 문제 대두가 되두되었을 때 협의로서 자녀들은 영주권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할린 문제에 대해서는 영주 귀국시키는 사업을 하기 시작, 현재 안산마을 영주 귀국자들을 위한 500세대 아파트 건립자금(약 40억엔)을 일본에서 지원했습니다. 인천에 요양원 100평상, 둔천동 80여대의 아파트 등. 2000명 정도의 사할린 동포 아직도 영구 귀국을 원하고 있으므로 일본 측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2,3세대를 위한 40억원정도의 자금을 들여 사할린 한국 센터 착공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논의가 있었던 것입니다.

종군위안부문제: 정대협등의 시민 단체등에 의해 큰 문제로 부각. 이가 한일 협정 해석과도 연관되어 큰 문제되었습니다. 우리의 입장은 이것이 한일협정에서도 논의되지 않은 국가 범죄라고 주장했습니다. 고노 관방장관이 90년대 초에 정신대 모집과정에 강제성에 대해서 사과를 했으나 아직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은 인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90년대 중반 일본이 법적 배상보다는 아시아 여성 기금의 형식으로 해결하려 했으나 정대협에서는 이를 반대하였습니다.

유골 문제: 이 것은 인식의 문제와는 관련이 없는 인도적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자료 불충분으로 진전이 더딥니다.